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개선 연구

FSB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정책이나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이나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Fintech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여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연구위원)

1. 추진 배경 및 연구의 목적

2017년 6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의 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와 2018년 2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보고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¹

FSB가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 국제협력 사항은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위험 관리 및 위험 모니터링 분야로서, Fintech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3자 서비스제공 업체의 운영리스크 관리, 사이버 위험 완화, 거시금융 위험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또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들 중 국경간 법적 이슈와 규제 정합성, 적시성 원칙에 따른 규제 범위와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공개 등 규제적적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향후 금융규제나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 등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국내 금융당국의 경우에도 금융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소위 Fintech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내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향에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전통적인 감독이나 규제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핀테크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부작용(공정경쟁 방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 등)에 대하여도 지적² 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FSB의 해당 보고서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융안정이나

1.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 6. 27., pp.1~59(www.fsb.org).

2.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 2., p.4.

3. 한국은행(홍 - 금융안정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2018. 6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lid=10045275&menuNo=200769>) 2018.10.22. 최종 검색)

거시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Pay”와 같은 국경간 모바일 제3자 지급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에 대한 규제 적정성과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금융감독체계에 더해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Fintech 분야 이슈들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맞추어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한 부분으로 “국내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핀테크 유형별 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잠재리스크 증가 가능성이나 사이버 리스크 내지 제3기관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Reg-Tech 도입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부분이 될 것임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FSB가 국제협력 필요성과 각 당국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관련 법제 적용 여부 및 규제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성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고민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간의 조화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과 기대효과

FSB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정책이나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이나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Fintech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여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규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특성상 금융안정성은 서비스·상품 제공자로서의 업체와 이용자(금융소비자) 간 편리성·접근성·보안성·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총체적·종합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안정 법제 개선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에 따른 Fintech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장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기초로 시장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지위 제고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즉, 보고서 본문에서는 i) 금융규제 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검토, ii) 금융감독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규명 및 Fintech시장의 장기적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제시, iii) 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의 규제환류체계 확립과 Fintech 관련 규제 설계 과정에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iv)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안 도출 등을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금융분야 기술혁신과 금융안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감독 체계의 타당성 부여를 위한 제도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금융안정 관련 감독당국의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위험 요소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